

중소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지원책 “중소기업 에너지클리닉”

에코시안 컨설팅사업부문 산업컨설팅팀 김재근 팀장

■ 배출권거래제 법률안 최종 통과, 강화된 규제에 대한 대응 필요

국가 온실가스감축 중기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시행령이 고시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2011년 9월, 정부는 동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관리업체 개별로 배출허용량 부여를 통해 목표설정을 완료하였고, 합의된 허용량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속에, 다소 무리한 일정으로 시행된 제도인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 2년이란 시간, 정부는 제도 정비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업은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최종 통과 되었다.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의 패널티를 부여 받는 목표관리제에 이어 시행될 배출권 거래제는 배출허용량 대비 초과 배출량에 대해 톤당 과징금을 부과 하는 보다 강력한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기업들은 남은 목표관리제도 일정(~2015) 하에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력 피크제 등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대응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배출권거래제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의 사각지대

목표관리제의 주요 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명세서 제출’, ‘목표협상’, ‘이행계획서 제출’의 첫 번째 One Year Cycle이 지났고 본격적인 감축 이행시기인 2012년에 들어선 현재,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들이 정부정책에 내는 목소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대기업들은 그동안 많은 에너지를 줄여왔기 때문에 추가인 감축은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둘째, 중소기업들은 투자여력 부족, 대응 인력 부족, CEO의 관심 부족 등으로 현실적인 감축활동이 힘들다고 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추가감축에 대한 부담은 자체적인 에너지감축 R&D, 정부의 외부감축 정책 활용, BM계수를 통한 배출량 할당 계획 등을 통해 부분적 해결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정부가 당근 없는 채찍질을 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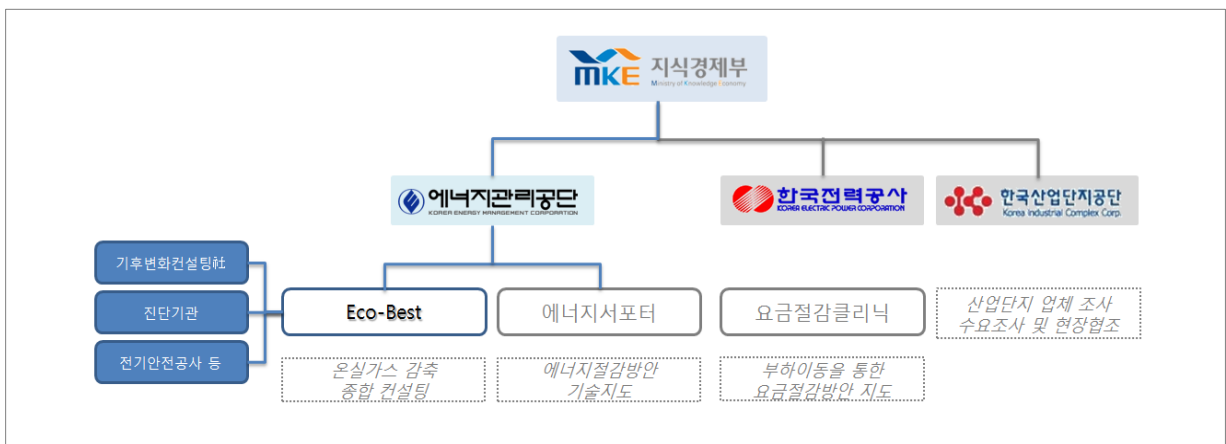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정책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졸업 시 급격히 증가하는 부담에 따른 성장통이 따르는 것을 보면, 중소기업의 정부지원책 의존성을 잘 알 수 있다.

목표관리 대응 실태에 관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가 넘는 기업이 목표관리제 전담 대응인력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힘들며, 온실가스 감축기술 정보 파악 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도 첫해 년도에 일부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금에 의한 컨설팅을 통해 목표관리제 이행을 하였지만, 컨설팅을 받는 기간 동안 담당자의 잦은 변경 및 겸업으로 인한 업무과다로 인해 관련 지식 및 노하우 전수를 제대로 받지 못한 탓으로, 두 번째 년도인 2012년은 첫 해년도인 2011년도 보다 목표관리제에 대한 대응 수준이 오히려 낮아지거나 관심도가 줄어들었다. 결국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 아래 비용만 지원하여 일시적으로 목표관리제를 위한 서류제출이 가능하도록 컨설팅을 실시한 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정부규제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 측면에서 사실상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동일한 설문조사의 에너지감축관련 항목을 살펴보면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상황을 좀 더 알 수 있다. 절반이 넘는 기업이 투자여력이 없어 매출액의 극소량만을 감축비용(설비 투자 등)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투자 예산은 중장기로 갈수록 감소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추가 고용할 생각이 없다는 기업이 대다수였다. 즉,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직접적으로 기업경영과 연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에 따라 경영상황이 유동적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규제대응비용 지출이 불가피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한 대응 여력이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올바른 중소기업 지원 정책 “중소기업 에너지클리닉”

중소기업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넘어 전기료의 인상, 전력 피크제 등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를 통한 비용절감에 관심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지식경제부에서 좀 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으로 “중소기업 에너지클리닉”사업을 도입하였다. 본 사업은 아래 <그림>과 같이 “Eco-Best사업”, “에너지서포터”, “전기요금절감클리닉”의 3개 분야로 구성되며, 공정개선 등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과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자체역량 및 전문 인력이 부족한 국가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단이 구성되어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중소기업에 필요한 1. 인력, 2. 비용, 3. 기술, 4. 전문지식(정보)을 모두 지원함으로 써,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내는 것이 목적이다.



[그림1] 중소기업 에너지클리닉 추진체계, 지식경제부 보도자료(4. 23)

중소기업 에너지클리닉은 기후변화컨설팅¹⁾, 진단기관, 전기안전공사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온실가스 감축 종합 컨설팅을 수행하며, 한국전력공사 지역본부별 전력요금 절감 전문가가 전력요금 분석을 통한 절감방안을 제시하는 등 컨설팅 결과를 통해 중소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및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을 이룰 수 있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클리닉을 통해 중소기업이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등 정부 정책 대응
2. 에너지 낭비요인 개선 및 절감방안 발굴(신기술/설비 정보 파악 등)
3. 에너지절감과 관련된 정부의 타 지원책과 연계를 통한 투자비용 해결방안 강구
4. 전력 요금 절감에 따른 경영개선
5. 전기 안전관리 현황점검을 통한 작업환경 개선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을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책으로는 가장 포괄적인 모습을 갖춘 형태인 “중소기업 에너지클리닉”은 현재 시작단계이지만,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그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모든 지원책은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시너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수요자가 충분히 받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데 공급자가 공급을 한다고 한들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중소기업은 비용절감을 통해 경영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 하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부 정책의 실질적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김재근 팀장



(주)에코시안 / 컨설팅사업부문 / 산업컨설팅팀

Tel : 02) 2621-9843 / Email : jk@ecosian.com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17 백상스타타워1차 8F

¹⁾ 에코시안은 2012년 5월 현재 기후변화컨설팅社로서 “Eco-Best사업”을 수행중임.